

“파업 불참하면 매일 5만 원 준다”

신일정밀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 ... 10년 차 노동자 월급 200만 원, 파업대체인력은 270만 원



“파업에 불참하면 매일 5만 원을 주겠다.” 지난 10월 23일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가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이 붙인 공고문이다.

사측은 파업 기간 개인별 생산량을 측정해 ‘생산성 장려금’ 지급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당한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금속노조 신일정밀지회는 11월 11일 강원도 강릉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본관 앞에서 ‘강릉 중견기업 신일정밀, 노조탄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면파업 20일째인 지회는 노동부에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촉구

했다. 지회는 노조파괴 노무사인 경영 고문 이강훈이 아니라 실제 결정권을 가진 민성기 전무이사가 대화에 나서야 노사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일정밀은 매년 70~80억 원의 흑자를 내면서 작업에 필요한 장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재사용해 썩은 절삭유 때문에 피부병에 걸려도 개인 돈으로 치료했다. 낡은 기계와 안전장치 부실로 매년 산재 사고가 발생해 산재 다발 사업장에 꼽히기도 했다.

참다못한 신일정밀 노동자들은 지난 8월 19일 조직 형태변경 총회를 열고 금속노조 가입을 결의했다. 사측은 그때부터 노동자, 노동조합 탄압을 본격화했다.

온갖 꼬투리를 잡아 징계를 위한 문답서를 남발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작업대를 떠나자 근무지 이탈이라며 이석 확인서를 요구했다.

신일정밀지회는 금속노조 가입 후 현장 순회를 벌이며 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조사했다. 위반사항이 200건을 넘었다. 노동부 강릉지청이 9월 18일 사측에 산안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자, 사업주는 경영철학 훼손 운운하며 폐업을 공고했다. 그날은 신일정밀지회가 쟁의 조정신청을 한 날이었다.

“범죄자 이강훈이 노조파괴 주도”

신일정밀의 모든 노동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는 경영 고문인 이강훈 노무사가 주도하고 있다. 이강훈은 신세계그룹 계열사 노조파괴 범죄로 직무 정지당한 전력이 있는 범죄자다.

정원영 노조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강훈 노무사와 사측에 대한 즉시 압수수색 촉구했다. 정원영 사무처장은 “사측과 이강훈은 노조파괴를 위한 공격적 직장폐쇄와 파업 유도 후 공권력 투입 등의 노조파괴 수법을 쓰지 못하게 되자, 교섭 거부와 조합원 감시, 대체인력 투입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로 노조를 흔들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정원영 처장은 “노동부는 신일정밀이 부당노동행위 증거를 없애기 전에 서둘러 압수수색을 시행해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해야 한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재동 신일정밀지회장은 “신일정밀에서 이강훈 노무사 지시 없이 인사, 노무, 산업안전 등 일처리를 할 수 없다. 이강훈이 현장을 돌며 꼬투리를 잡아 문답서를 남발하는 바람에 조합원들은 ‘우리가 일하러 왔지 감옥에 온 건 아니지 않냐’ 라고 하소연한다” 라고 전했다.

손재동 지회장은 “매년 수십억 원의 영업 이익에서 단 몇 % 만이라도 노동자들에게 돌려줬다면 파업은 없었을 것이다. 2007년 지게차 면허를 취득해 자격수당 5천 원을 받았다. 13년이 지났지만, 자격수당은 아직도 5

천 원이다. 2.9% 임금 인상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 라고 한탄했다.

손재동 지회장은 “민주노총에 이용당해 파업하는 거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더는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당당하게 일하는 만큼 우리도 회사의 일원이라 말하기 위해 파업을 한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공인노무사가 경영 고문이라 교묘한 방식으로 노조를 괴롭힐 줄 알았는데 전혀 교묘하지 않다. 그냥 내놓고 부당노동행위를 한다” 라고 꼬집었다.

박준성 노무사는 신일정밀 사측이 ▲노조 단체교섭권 유린 ▲노조 활동과 쟁의행위 위축 목적 지배개입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 근로 인력 투입 ▲CCTV 이용 조합원 감시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전혀 교묘하지 않은 부당노동행위”

사측은 지회가 금속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자, 절차를 문제 삼아 변경 효력을 부인하며 교섭을 거부했다. 지회가 다시 임시총회를 열고 조직 형태변경을 재차 결의해 교섭 거부 명분이 사라지자, 임금교섭에서 전임자를 요구로 내걸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섭을 거부했다.

사측은 지회가 요구한 산업안전에 관한 노동부 근로감독을 평

계로 폐업을 예고하며 노동자를 협박했다. 박준성 노무사는 “신일정밀의 행위는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를 향한 협박이기도 하다” 라고 지적했다. 사측은 파업 불참을 조건으로 ‘위기 극복 장려금 5만 원 지급’ 을 제시하며 쟁의행위를 무력화하려 했다.

사측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명백한 파업 파괴행위를 저질렀다.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한 적이 없는 사측은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바로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게다가 10년 차 노동자가 야근 근무까지 해서 받은 월급이 세후 200만 원에 불과한데 대체인력에 270만 원을 지급했다.

사측은 지회 간부들에게 분 단위로 행적을 기록한 경위서를 보냈다. 모두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한 행위들이었다. 사측이 CCTV로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회가 폐업 예고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투쟁하자, 사측은 폐업 철회 의사를 밝히고 대표이사를 교체했다. 하지만 실권을 쥐 민성기 전무는 이강훈 노무사와 공모해 노조파괴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회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동부 강릉지청을 출발해 옥천 오거리까지 행진하며, 강릉시민에게 신일정밀의 부당노동행위를 알리며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모든 노동자 벼랑 내모는 노조법 개악 중단하라”

민주노총 비정규 노동자 결의대회 ... “문재인 정권, 열사 이용 중단하고 전태일 3법 입법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노동법 개악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각 정당에 노조법 2조 개정 등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이 발의한 전태일 3법을 연내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1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쟁취 비정규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두 곳에서 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희망연대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삼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국회에 올린 전태일 3법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물론이고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 모두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10일 민주노총 산별 연맹대표자 회의에서 1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라며 “어떻게 만들어진 노동조합이나 민주노조 사수와 전태일 3법 쟁취에 남은 11월 민주노총의 모든 힘을 모으자”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전태일 열사와 노동자 기만”

양동규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대회를 통해 “50



년 전 전태일 열사의 항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국민의 힘이 민주당과 함께 노동법 개악을 시도한다면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해 모든 힘을 다해 싸우겠다”라고 경고했다.

양동규 집행위원장은 “아시아나 항공이 산업은행에서 기간산업 안정자금 2조 4천억 원을 지원받았고 비정규직 노동자 3만 명을 해고했다. 자본에 지원금을 주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해고하는 아편의 대한민국을 투쟁으로 바꿔낼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여한 금속노동자들이 투쟁 결의 발언을 이어갔다. 차현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왜 당선되자마자 인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났잖나. 정부와 정치인들이 보기에 도 비정규직 문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차현호 지회장은 “노조 설립 필증 한 장 반값이라고 몇 년을 싸우고 있다. 근로기준법조차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부지기수이다.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는 전태일 열사에 훈장을 주기 전에 노동법 개악부터 멈춰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일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장은 투쟁사에서 “불법 피견 범죄자는 현대차 자본인데 범죄 피해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검찰과 노동부

는 현대차 자본이 자행한 부당노동행위는 언제 해결될지 모르니 잊고 살라고 한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며 172일째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 중이다. 김영일 지회장은 “차별 없는 일터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하라”

위장 폐업 청산 철회를 촉구하며 상경 투쟁 중인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신연지회 조합원들이 이날 결의대회에 함께했다.

김은형 노조 한국신연지회 수석부지회장은 “1970년 미산수출자유지역에 들어와 지금까지 온갖 혜택을 받은 외국투자자본이 노동자를 내쫓고 주주총회 10분 만에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한국 정부와 정치인들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라며 “외투지본 횡포가 이렇게 심한데 여태 먹튀를 막는 법조차 만들지 않았다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김은형 수석부지회장은 “한국신연 노동자들은 일본 자본의 탄압에도 민주노조 깃발과 일자리를 지켜왔다. 공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연대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6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와 산별노조 활동 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이 법안을 노동 개악·노조파괴법으로 보고, 입법을 막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